

‘시민 안전 최우선’ 여름철 폭염 대책 가동

전주시,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 운영... 폭염대응 상황관리 T/F팀 운영·폭염 저감시설 점검 등 추진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평균기온이 높고,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폭염의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번 폭염대책기간 전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고,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폭염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시설 관리 등을 담당

하는 ‘폭염대응 상황관리 T/F팀’을 구성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상황에 맞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저질환자, 아외근로자,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생활지원사와 방문간호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야외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점점과 더불어 △폭염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 수칙 준

수 여부 등을 꾸준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인을 위한 대응도 확대될 예정이다. 가운데 시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시간 조절을 권고하고, 폭염 시 기본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방송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폭염 특보 및 대응 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축산농가에는 사료 관리와 축사 환기, 냉방장치 점검 등 가축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경로당과 복지시설, 도서관, 야외 무더위쉼터 등 총 548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 쉼터의 냉방기 작동 상태와 위생 환경을 점검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올해 주요 도심 보행로

에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고, 살수차 운영을 강화하는 등 폭염저감시설도 대폭 확충기로 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3곳을 선정해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환하고, 냉온열의자와 에어커튼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 누리집(www.jeonju.go.kr)과 SNS, 전광판, 마을 방송, 부채 제작 배포, 양산대여 등을 통한 폭염 대응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폭염은 기후 위기의 한 단면으로, 예방과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7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탄소소재 응용 제품의 기술 표준화와 국내의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발솔루션 기업대상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

탄소기업 대상 전략설명회 전주서 열려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발솔루션 기업대상 지원사업 방향 제시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기업의 기술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17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탄소소재 응용 제품의 기술 표준화와 국내외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발솔루션 기업대상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탄소소재 및 부품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준 및 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전략 △정부 지원 방향 △탄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발솔루션 기반구축 사업 개요(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단

체표준화 제도 소개(한국표준협회) △표준개발 및 보급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 △탄소복합재 표준 개발 방향 △시험·평가 장비 활용 방안 등 총 6개의 전문 세션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소개를 넘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탄소제품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과 유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탄소기업들이 국내외 표준과 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갈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진흥원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신설 조직개편

청년 안정적 정착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시행 등 추진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17일 열린 ‘제42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청년들이

취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인구청년정책국’은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의 청년정책과가 옮겨오고, 청년일자리과와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의 3개 과가 신설돼 총 4개 과로 구성된다.

인구청년정책국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및

충형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또한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과 인구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명칭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변경하고,

도서관본부를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변경해 평생학습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부서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관련 규칙·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으로, 오는 7월 정가인사 때부터 반영된다.

/권희성 기자



중화산2동 마을계획추진단·꽃두령마을, 옥상 텃밭 체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 마을계획추진단·꽃두령마을(대표 전덕일)은 한들초등학교 학생들과 하늘농장 텃밭 정원 체험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화산2동 한들초 학

생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마을계획추진단·꽃두령마을 전덕일 대표의 옥상 텃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추, 상추, 오이파기 등 농작물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

/권희성 기자



송천1동 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 찰밥·반찬 나눔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인옥), 새마을협의회(회장 송정옥)는 지난 16일, 새소망교회에서 찰밥·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나눔 행사는 새마을부녀회·협

의회 회원 15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찰밥과 반찬 3종을 정성스레 준비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장애인 세대, 독거어르신 등 관내 취약가구 4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평화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평화도서관은 오는 7월 2일부터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독서 활동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애인 복지 특화 도서관인 평화도서관은 ‘수어, 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 프로그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초급 수어 교실’ △힘으로 차별속 장애인권 이야기 가 있는 ‘작가초청강연’ 등이 오는 10

월 1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영상도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정원은 15명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어를 배우는 수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